

# 한국당, 차 '자진탈당 해달라' 의사 전달

### 지지층 분열 막고 친박계 등 반발·출당 문제 쉽게 해결 기대감 바른정당과 통합 때문에 윤리위도 고심...洪 "우리는 먼길 가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기간을 탈당 '데드라인' 기간으로 설정했던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기다리며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를 16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윤리위 개최를 18~19일경로 계획하고 있다. 앞서 홍 대표는 친박계 의원들의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탈당 시기를 구속연장기간으로 연기한 바 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방미 전 윤리위를 열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6개월 여간 공식발언을 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하면서 자진 탈당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

법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80차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을 제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직후 "진작 그런 말을 했어야 한다"면서도 "당은 정치적

부담이 줄었다"고 호평했다. 역사적 명예와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뜻이 자진 탈당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란 표현을 통해 보수층의 동정 여론을 몰고 지지층 결집을 할 수 있던 계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본인의 재판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일 뿐 자진 탈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홍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표를 보내 자진 탈당 의사 여부를 묻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다. 지지층 분열을 막고 친박계의 반발 더 나아가 선례를 들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영란법 개정하라, 한국당-농축수산·회계·외식업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농축수산·회계·외식업계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림(앞줄 왼쪽 네번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과 관계자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배수동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 의장, 이완영 김영란법대책TF팀장, 제갈창근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 사무총장.



국민의당 김태일(오른쪽) 제2차당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제2차당위원회 최고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대표, 김 위원장은 "정치노선의 문제도 당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제2차당위서 '통합론' 분출

### 김태일 "연정·통합논의 피할 필요 없어...공론화해야"

국민의당 제2차당위에서 1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김태일 제2차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주에 들어서서 정치노선에 관한 문제가 우리 국민의당에 중요한 화두와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연정 얘기도 나왔고 통합 얘기도 나왔다. 연대와 협력이란 것은 정치법법의 기초"라고 운을 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연대와 협력의 문제, 또 연정과 통합 문제는 국민의당이 피할 필요가 없다"며 "정당당파에게 이 문제를 펼쳐놓고 검토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점을 출발로 해서 정치노선의 문제도 국민의당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태일 제2차당위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원장은 바른정당의 보수통합과 관련해 "민심과 어긋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이합집산"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정치인은 누구나 역사의 어느 편에 이름을 올릴지 결정해야 한다"며 "바른정당은 바른 선택을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역시 바른정당과의 통합·연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문병호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다른 당과 연대 또는 통합을 논의한다면 그 대상은 바른정당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 부위원

장은 이어 "바른정당이 적대적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3의 길을 걷는 소신과 비전을 가진 분들이 중심이 돼 바른 길을 간다면 국민의당과 연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당 지지율이 19.7%로 민주당(46.3%)에 이어 2위까지 치솟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직접적으로 통합론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국민들의 객관적 민심을 알 필요가 있어 그걸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차원에서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조사 결과에 따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 착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장 제2차당위원회가 혁신 방안으로 내놓은 전국 시도당·지역위원장 일괄사퇴안에 대해 원외 지역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여서 당내에서 민만참은 감론을바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역위원장을 사에선 "일괄사퇴안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라는 격양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지난 13~1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3.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c.go.kr) 참조)

뉴스스

## '차인권침해' 논란에 법무부 발끈... "오히려 특혜 수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비인권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0.08㎡(약 3.05평) 크기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 일반 수용자는 이보다 좁은 면적의 방에서 다수가 생활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감자의 공용 수감방을 박 전 대통령 독방으

로 개조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공용 수감방을 독방으로 개조... 매트리스까지 제공" "특혜 받는다는 시각 있을 정도... CNN 영동한 보도"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

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 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CNN은 전날(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은 MH그룹 관련 문건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비인권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CNN은 박 전 대통령이 열악한 시설에서 수감 중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구치소는 과밀수용 때문에 난립"이라며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시각이 있을 정도인데 CNN은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영동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뉴스스

Jindo Culture and Art Festival / 珍島文化藝術祭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

보배섬 진도

# 진도문화예술제

2017. 10. 19. 목 - 10. 22. 일 (4일간)  
장소 진도읍 향토문화회관 일원

제25회 대한민국의 우수지도개 선발대회

10. 21. (토) ~ 22. (일) 진도군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제8회 진도 꽃게한라당 잔치

10. 21. (토) ~ 22. (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일원